

No. 2013-51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12. 23

1. 일본경제지표

2. 2013년 일본경제 5대 뉴스

- ① 아베노믹스
- ② 엔저
- ③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결정
- ④ 소비세 인상 결정
- ⑤ TPP 교섭참가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시황지표

- 엔화환율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표로 달러당 104엔대까지 엔저 가속
- 장기금리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표로 주 후반부터 상승세로 반전

구 분	12.16(월)	12.17(화)	12.18(수)	12.19(목)	12.20(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103.17	103.05	103.00	104.12	104.47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020.25	1,021.35	1,025.15	1,008.63	1,015.01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5,152.91	15,278.63	15,587.80	15,859.22	15,870.42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685	0.665	0.660	0.675	0.680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3분기 실질 GDP성장율은 전기비 0.5%, 연율 1.9%로 4분기 연속 플러스
- 2013년 11월 무역수지는 수출 감소와 원유 등 연료수입 증가로 적자폭이 1.3조 엔으로 확대

* 對한국 무역수지는 1.2천억 엔 흑자로 흑자폭이 축소

구분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실질GDP증가율(연율%)	1.2(2.0)	4.1				3.8			1.9(P)		-	-
수 출(천억엔)	639(637)	48	53	63	58	58	61	60	58	60	61	59
수 입(천억엔)	721(707)	64	61	66	67	68	62	70	67	69	72	72
對한국 수출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4.77	4.59	4.57	4.64	4.33
對한국 수입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3.04	2.78	2.72	3.29	3.10
직접투자(억 달러)	(1,223)	234				331			479		-	-
對한국 투자	(40)	7.7				9.1			8.6		-	-
소비자물가(전기비,%)	▲0.2(0.0)	▲0.3	0.1	0.3	0.3	0.2	0.0	0.1	0.3	0.1	0.2	-
실업률(%)	(4.4)	4.2	4.3	4.1	4.1	4.1	3.9	3.8	4.1	4.0	4.0	-
경상수지(천억엔)	42.9(47)	▲3.6	6.4	12.5	7.5	5.4	3.4	5.8	1.6	5.9	▲1.3	-
엔화 환율												
對미달러	82.9(80.1)	89.2	93.2	94.8	97.7	101.0	97.4	99.7	97.9	99.2	97.9	100.0
對원화(100엔)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	1,165	1,130	1,142	1,095	1,090	1,064
외환준비(억 달러)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12.5	12.5	12.7	12.8	12.8
국채금리(10년 연율%)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0.795	0.720	0.680	0.590	0.600

주1. ()는 역년(1~12월)기준

-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 넷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3. (P)는 1차 속보치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일본제조업의 구조변화』 이토츠헤사, 12월17일

* 출처 : http://www.itochu.co.jp/ja/business/economic_monitor/files/20131216_2013-211_J_Manufacturing.pdf

2. 2013년 일본경제 5대 뉴스

- 2013년은 아베노믹스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베노믹스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도 많이 다루진 한 해였음
- 아베노믹스는 독립된 이슈가 아니고 아래에서 다루고자 하는 엔저, 소비세 인상 결정, TPP교섭 참가, 도쿄올림픽 개최 결정, 한일경제관계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일본경제와 한·일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쳤음
-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소위 3개의 화살로 요약되는 아베노믹스가 1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GDP가 4분기 연속 플러스성장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기조가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우세
-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성장전략과 함께, 내년 4월 소비세 인상 후 경기후퇴 방지를 위한 경제대책 효과와 수출의 향방, 그리고 임금 상승을 통한 디플레이션과 탈출과 재정재건의 병행 여부가 아베노믹스의 장기적인 성공에 열쇠를 쥐고 있음

1. 아베노믹스

- 아베노믹스는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재생을 위한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로 구성
 - 아베노믹스의 기대효과는 ‘개인소비 증가→수요확대→설비투자증가→생산 확대→기업수익개선→임금상승→개인소비 증가’라는 경기의 선순환 실현에 있음
-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어, 실패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비 부진→수요위축→설비투자감소→생산감소→기업수익악화→임금상승실패→개인소비 부진’의 디플레 스파이럴을 가져올 수 있음
 - 인플레이션과 장기금리는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2%의 목표를 설정하여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면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금융비용 증가, 국채의 지불이자증가 등을 통해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킴
 - 경기가 나빠질 경우, 국채 발행 증가가 불가피하나, 재정 악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상황
 - 2013년도 예산안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어 재정 악화가 우려

- 재정 악화는 일본의 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재정재건을 동시에 추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
-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은 금융완화정책임
 - 2012년 11월 중의원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일본경제 부활의 과제로 설정하고, 2%의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과 대담한 금융완화로의 정책전환을 일본은행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음
 - 금융완화와 기대 물가상승율의 상승은 엔저에 의한 수출증가, 리스크 자산으로의 민간자금 이동에 의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설비투자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
- 금융정책의 전환과 함께,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확실하게 탈출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 두 번째 화살인 단기적인 재정지출 확대임
 - 1998년부터 15년간 계속된 디플레이션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의 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음
 - 민간수요에 더하여 정부지출에 의해 총수요를 늘리고, 나아가 기대 물가상승율의 상승과 함께 수급 겹을 축소시켜 디플레이션 탈출을 꾀했는데, 여기까지는 기대의 개념을 중시하는 새로운 케인즈파(뉴 케인지언)의 정책임
-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단기적인 정책대응인데 비하여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장기적인 정책대응임
 -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인구감소가 현저한 가운데,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시장 개척과 규제완화에 의한 기업성장과 1인당 생산성 향상, 여성·고령자의 노동참가율 상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6월 14일 일본재흥전략으로 각의에서 결정
-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 중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성공한 것은 재정정책뿐이며, 그것도 양적·질적 금융완화라는 2번째 화살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는 평가임
- 금융완화정책은 적중하기는 했으나 장기금리 하락, 기대에 의한 물가상승 등 주요 파급효과가 불확실하고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정적이었음
 - 아베노믹스의 금융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뒤흔돈의 질적 금융완화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 특징임
 - 첫째, 종래보다도 만기까지의 잔존기간이 긴 국채를 구입한다고 하는 취지 때문임
 - 둘째, 기대라는 변수로서, 명목금리의 하락 여지가 적은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임으로써 실질금리를 저하시키려는 대처방법인데, 이 같은 시도는 전례가 없는 도전으로 이번 완화가 별칭異차원 완화라고도 불리는 이유임

-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단기적인 대응이라면,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장기적인 대응으로 아직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들이 많고 효과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임
- 2014년 아베노믹스는 우선 성공하고 있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계속하는데에 과제를 두어야 한다는 평가임
- 만일 물가상승율이 일본은행의 목표치를 하회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본은행의 추가완화가 필요
- 무엇보다도 2014년의 과제로 중요한 것이 규제완화와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성에 바탕을 둔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는 평가

② 엔저

- 2013년 4월 4일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양적·질적 완화(QQE)를 발표하기 전 날까지 엔화 환율은 달러당 78엔에서 93엔까지 약 20% 엔저, QQE 발표 후에는 100엔대를 돌파하는 수준으로 엔저가 가속
- 5월 10일 동경외환시장에서 기록한 달러당 101엔대 전반은 2009년 4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저치임
- 5월 22일 버냉키 FRB의장의 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의 영향으로, 이후 엔화환율은 100엔 전후에서 추이
- 미국의 경기회복으로 양적완화정책이 축소되고 미·일 금리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달러 매입이 증가한 반면,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이 외채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엔화 매도 압력이 증가한 것이 엔저의 배경
- 이에 가세하여 일본의 무역적자 정착 등 엔을 둘러싼 수급구조 변화도 엔저 촉진요인으로 작용
- 12월 18일 미국 FRB가 5년 만에 양적 금융완화를 축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엔화 가치가 달러당 한 때 104엔대 전반으로 5년 2개월 만에 약세를 보임
- 그러나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은 수출환경 악화에 더하여 시차에 의한 J커브효과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출물량 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품목이

적지 않은 반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수입연료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줄지 않고 있음

- 엔저의 영향으로 한국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분은 국내 수출산업으로 일본기업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등 주요 품목들은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
- 자동차의 경우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일본 완성차업체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어, 일본기업들이 수출가격 인하에 나설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는 가격경쟁력이 약화
- 철강, 섬유산업도 주요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높은 수출 경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전도 프리미엄 완제품 및 부품분야에서 일본기업들과 경쟁
- 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등은 엔저의 악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

③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결정

- 2013년 9월 8일 2020년 올림픽 개최지가 도쿄로 결정됨에 따라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집중
- 아베총리는 “올림픽을 기폭제로 15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과 축소지향의 일본 경제를 불식시키고 싶다”면서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는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성장전략에 이어 제4의 화살 효과가 있다고 평가
- 도쿄도는 2013~2020년 기간 중 올림픽 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파급효과를 약 3조 엔으로 시산
- 도쿄도의 시산은 국립경기장과 선수촌 등 시설 투자, 대회 운영비, 관광객들의 숙박·음식 및 쇼핑 등 소비를 합산하여 분석한 것임
- 이 같은 수요가 생산을 촉진하여 소득으로 연결되는 생산유발효과는 도쿄도 내에서 1조 6,573억 엔, 여타 지역도 포함한 전국 합계로 2조 9,609억 엔
- 고용은 전국적으로 15만 2,000명의 유발효과가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과 건설에 미치는 효과가 큼
- 그러나 도쿄도의 시산에는 올림픽 개최에 따라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고속도로 등의 정비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다이와증권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성장과 인프라 정비까지 포함하면 150조 엔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

- 일본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구미나 아시아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관광산업이 올림픽 개최로 앞으로 7년 동안 배증한다고 가정하여 95조엔 증가, 나아가 일본정부가 내걸고 있는「국토강인화계획」에 의한 인프라 정비가 55조엔 증가, 합계 150조엔 증가
- 기업수익과 주가에 대한 영향은 일본 주식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이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평균주가가 금년 중 18,000엔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노무라증권이 예측
- 다이와연구소는 과거 개최국 중에는 올림픽이 끝나면 일과성 수요가 사라져 그 반동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공공투자 등은 비용 대비 효과를 정밀조사한 후 성장전략 등 큰 정책의 방향성에 맞추어 필요한 것만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

④ 소비세 인상 결정

- 일본정부가 10월 1일 최대 정책현안인 소비세 증세문제에 대하여, 2014년 4월부터 현행 5%에서 8%로 인상하기로 각의에서 결정
 - 일본의 내년 소비세율 인상은 1997년 4월 하시모토 내각에서 3%에서 5%로 인상된 이후, 17년 만에 2번째
 - 그러나 2015년 예정되고 있는 소비세율의 추가인상(8%에서 10%)에 대해서는 판단시기를 포함하여 유보
- 일본정부는 소비세 증세로 인한 경기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1조엔 규모의 기업 감세에 더하여 5.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마련
- 일본정부는 경제대책이 1%정도의 GDP의 증가와, 25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효과가 침투되기에는 불투명한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
- 10개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의 평균 예측치에 의하면, 실질 GDP성장율은 소비세 증세 직후 내년 4-6월 기간에 ▲4.5%로 떨어지게 되나, 7-9월 기간에는 2.3% 플러스 성장으로 복귀
 - 경제대책을 실시하더라도 경기감속은 피할 수 없으나, 그 후에는 완만히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
- 재정자금의 투입으로 실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경우, 내년 4-6월 기간 중 감속 폭이 클지도 모름

- 경기감속 폭이 크게 되면, 증세로 냉각된 일본 소비자들의 심리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
- 일본정부는 내년 말에 2015년 10월에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 인상(10%)을 최종 판단하게 되는데, 증세 후 경기의 재부양과 외수의 회복이 병행되면 10% 인상을 결정하기가 쉬어지나 그 시나리오가 실현될지는 아직 불투명
- 이 같은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물가와 임금의 움직임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음
 - 일본은행 예측으로는, 2014년도는 소비세 증세분을 포함한 소비자물가는 전년비 3.3% 상승하고, 계속 늘어나게 되는 사회보장비를 충당하기 위한 연금보험료도 매년 증가
 - 성장력을 높임으로써 임금인상을 뒤받침하고 부담증가의 영향을 완화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회복이 어려움
- 현재 아베정부는 기업이 주도하는 선순환 흐름에서 활로를 찾고 있음
 - 아베정부는 기업 주도의 회복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모색하는 외에 잠재성장율을 높일 수 있는 선택수단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들의 반발을 각오하고 기업 감세를 실시
 - 첨단설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감세제도 신설, 임금인상을 실시한 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제도 확충, 지진피해복구책으로 실시되어온 특별법인세 폐지(1년 앞당겨 폐지) 등
 - 이중 특별법인세 폐지에 대해서는 12월 5일 발표한 경제대책에서 1년 앞당겨 폐지하기로 했으나, 중요한 관심사인 법인실효세율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고 실시를 보류

⑤ TPP 교섭참가

- 아베 총리가 3월 15일 기자회견에서 TPP교섭 참가를 정식으로 선언하고 미국과 새로운 경제권을 구축하고 아태지역의 규범제정을 주도할 것임을 강조한데 이어, 7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TPP교섭 참가가 정식으로 결정
- 일본의 TPP 참가는 그동안 동아시아 중시의 FTA정책으로부터 전환하여 미국의 FTA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은 특히, 관심이 높은 관세교섭에서 쌀과 쇠고기 등 농산품의 관세를 가능한 한 유지시키는 한편, 자동차 등 일본의 수출상품에 부과되는 역내 관세는 철폐시키려는 입장임

- 일본은 사전협약에서 미국에게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철폐를 가능한 한 유예해줌으로써 합의를 끝냄
- 일본이 지키려 하는 쌀과 쇠고기 등 농산품에 관한 관세교섭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농업국을 상대로 방어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
- 한편, 통신망을 개방하는 전기통신과 통관절차 등의 분야는 그동안 큰 틀에서 합의, 협정안 작성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을 정비 중
- TPP교섭은 한번 합의한 분야는 재교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선발 참가국들이 이미 결정한 분야에 일본이 관여하기는 어려움
- 21개 TPP교섭분야 중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상품시장 접근,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환경 등 5개 분야
- TPP교섭참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일본정부의 시산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출 증가 등에 의해 3.2조엔의 GDP증대효과(0.66%) 발생
 - 저가 농산품 수입으로 농림수산업 생산이 3조엔 정도 감소하게 될 것이나 여타 산업의 생산증가 및 소비 확대가 이를 보전
 - 경제적 효과의 내역을 보면, 소비에 의한 영향이 3조엔(0.61%), 투자가 0.5조엔(0.09%), 수출이 2.6조엔(0.55%)의 GDP 증대효과가 있는 반면, 수입 증가로 인한 GDP감소 효과는 2.9조(0.6%)으로 시산
- 일본의 TPP가입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일본의 산업계에서는 TPP교섭참가가 유익하다는 의견이 많음
 - 특히 아태지역에서 적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업체로서는 비즈니스환경이 개선되어 수출 증가, 고용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 반면, 최소시장접근(minimum access)방식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쌀은 연간 77만톤의 수입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77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철폐되는 경우 쌀재배 농가에 대한 타격이 큼
-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TPP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은 전하고 있음
 - 한국은 한·중FTA를 우선시하여 한·중·일 FTA에는 비교적 소극적이었으나, 일본이 TPP교섭참가 쪽으로 기울고 난 이후부터 한·중·일 FTA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
 - 중국정부도 일본의 TPP참가에 제3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아태지역의 자유무역권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것을 경계

- 현재 TPP교섭 막바지 단계에서 일본으로서는 쌀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음
- 쌀에 대해서는 TPP를 계기로 생산조정제도 폐지와 관세인하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쌀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침
-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일관세 철폐유예기간을 최장기간으로 한다는 미·일 합의 때문에 관세철폐유예기간이 20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일본정부는 지적재산 및 투자관련 규정 등 난항중인 교섭 분야에서 금년 중 TPP 타결을 목표로 하는 미국에 협력하는 대신, 5~10년의 조기 관세철폐안을 제시
- TPP 교섭에서 일본정부는 쌀과 설탕 등 이른바 성역으로 취급하고 있는 중요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관세철폐대상품목을 선별할 방침
 - 5개 분야 586개 품목중 가공미 등 부차적인 상품 223개 품목이 철폐대상으로 자유화율은 93.5~96%에 이를 전망